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8730 취득세등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피 고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415,920원, 지방교육세 2,441,590원, 농어촌특별세 1,220,790원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B과 합하여 '분양회사'라 한다)과 ○○시 ○○구 D 판매시설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23. 분양회사에게 분양대금 652,000,000원을 완납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취득가액(610,39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24,415,920원, 지방교육세 2,441,590원, 농어촌특별세 1,220,790원 등 합계 28,078,3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9. 9. 24.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예비적으로 기망행위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9가합24851),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2022. 1. 27.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10. 23. 접수 제98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988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5,552,9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2021나20077), 2022.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2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 4. 25.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B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22. 5. 20.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원고는 2015. 10. 7.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3. 그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전부 지급하고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의하여
>
> 2)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계약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결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분양계약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기에 기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이 사건 분양계약은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실질적으로 무효 내지 취소가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청청구사유에도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동산의 취득 여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참조).

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98두14228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주장과 반대되는 판례이다.

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인무효 내지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① 제2 상가 내부 중앙에 가로 60cm, 세로 60cm의 기둥이 존재하여 상가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② B은 그 기둥의 존재로 상가 이용에 제약이 있음을 원고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제3 상가 전면을 통유리로 시공하고 제3, 4 상가 천정고를 6.5m까지 확보해주겠다고 기망하였으며, B은 상가 인근에서 직영으로 대형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상가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상가 인근에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대형매장이 들어섬에 따라 B의 상가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기망행위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각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설계 관련 유의사항에 설계변경,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이 기재돼 있고, 상가 내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부 설치된 기둥은 분양계약 목적물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상가에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가 내외부 기둥 등 존재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직영 키즈카페 입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오히려 '판매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고,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을 이유로 B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에게 착오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수원고등법원에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과 동일 상가내 유사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 계속 중이었는데(2020나18299), 위 사건에서 2021. 9. 17. 진행한 현장검증 결과 ① 대형키즈카페 예정 상가(F호)는 2020. 4월~8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재수급 등 어려움으로 2020.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점, ② 위 상가 인접 G호부터 H호까지 상가 중 일부(I호~J호, K호~L호, M호~N호)는 비어 있고, 나머지는 내부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 현장검증조서(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를 착오에 빠뜨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B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적극 다투었다. 그리고 수원고등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문 어디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실질적으로 무효 내지 취소임을 확인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라) 뿐만 아니라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10. 23. 접수 제98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988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5,552,950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정되었다거나 원고가 취득세의 부과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인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인무효 내지 취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공○○

판사 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판사 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⑤ 다음 각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끝.